

# 건설동향브리핑

## 제402호 (2013. 3. 11)

---

### ■ 경제 동향

- 2월 CCSI 11.1p 하락한 54.3 기록

### ■ 정책 · 경영

- 종합 평가 방식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필요
- 3월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

### ■ 정보 마당

- 빅데이터,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

### ■ 연구원 소식

### ■ 건설 논단 : 박근혜 정부의 ‘反面教師’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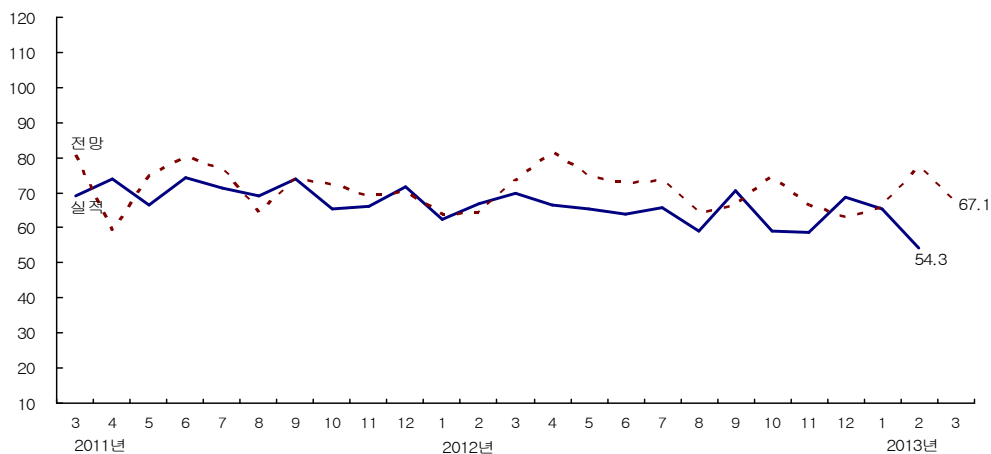
## 2월 CBSI 11.1p 하락한 54.3 기록

- 계절적 요인, 쌍용건설 워크아웃 · 한일건설 법정관리 신청 등 영향 -

### ■ 2010년 8월 이후 30개월 만에 최저

- 2013년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1.1p 하락한 54.3을 기록함.
  - 이로써 CBSI는 지난 1월(전월비 3.5p 하락)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특히 2010년 8월의 50.1 이후 3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
  - 1월에 이어 통상 2월에도 흑한기가 지속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저조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올 2월에는 1월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하락했음.
  - 뿐만 아니라 1월 조사에서 2월 CBSI 전망치가 77.2를 기록했는데, 실제 조사 결과 2월 CBSI 실적치가 이에 훨씬 못 미친 54.3을 기록함.
  - 이는 흑한기로 인한 계절적 요인이 CBSI의 회복을 제약한 가운데, 한일건설과 동보주택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쌍용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이 건설업체의 체감 경기를 크게 위축시킨 결과로 보임.
  - 또한, 2월 자금 관련 지수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볼 때 몇몇 건설업체의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신청으로 체감 경기가 위축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건설업체들의 자금 사정 역시 매우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 대형 및 중견업체 지수 큰 폭 하락,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과 동일

- 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 및 중견업체 지수가 전월비 10p 이상 크게 하락했고,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 수준을 유지함.
  -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1월에 전월비 7.2p 하락하며 85.7을 기록했는데, 2월에도 전월비 13.0p나 하락한 72.7을 기록해 작년 4월(7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무려 18.7p나 하락해 48.0을 기록했으며, 2008년 10월(전월비 26.6p 하락한 17.9 기록)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함. 이는 다수의 중견업체가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월에 한일건설, 동보주택건설 등 중견업체의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진 결과로 판단됨.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40.0을 기록했으나, 지수 자체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함.

<업체 규모별 CBSI 추이>

구분	2012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1월	2월		3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종합	66.4	65.4	63.8	65.7	59.0	70.6	58.9	58.7	68.9	65.4	54.3	77.2	67.1	
규모 별	대형	71.4	92.3	92.9	92.9	80.0	91.7	76.9	78.6	92.9	85.7	72.7	92.9	72.7
	중견	72.0	58.3	50.0	56.0	46.2	61.5	57.7	55.6	64.0	66.7	48.0	76.9	58.3
	중소	54.1	41.8	45.6	44.8	49.1	56.4	39.3	38.9	46.3	40.0	40.0	59.3	70.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3월 전망치, 2월 실적치 대비 12.8p 상승한 67.1

- 한편, 3월 CBSI 전망치는 2월 실적치 대비 12.8p 상승한 67.1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10p 이상 상승한 것은 3월에는 건설 경기 침체의 수준이 상당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3월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2월 CBSI가 매우 낮은 기저 효과도 반영되어 2월 실적치 대비 3월 전망치가 10p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발표를 비롯해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이홍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 종합 평가 방식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필요

- 선진국에서는 투찰 가격과 함께 입찰자의 기술력 평가가 일반적 -

### ■ 300억원 이상 중·대형 정부 공사 입찰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의 폐해 지속

- 최저가낙찰제는 2011년 현재 정부 발주 공사 집행 금액의 40%를 차지하는 등 발주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부 공사 발주 방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최저가낙찰제도의 본질상 저가 투찰이 당연하며, 과당 경쟁 및 덤핑 투찰이 가세하면서 최저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은 70%대 중반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다른 입·낙찰 방식과 비교하여 낙찰률이 10%p 가량 낮은 상태임.

<정부 공사 입찰 방식별 발주 현황(2011년)>

구분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	턴키/대안	수의계약	합계
건수	241	10,424	88	9,001	19,754
계약액(억원)	150,803	148,385	64,430	8,636	372,254
비중	40.5%	39.9%	17.3%	2.3%	100.0%

자료 : 대한건설협회, 'G2B 공공 건설공사 발주 통계', 2012.

-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원도급 업체가 덤핑 투찰이나 저가로 수주하면서 그 손실이 하도급 업체나 자재·장비 업체, 근로자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례로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신규 및 저임금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안전 재해가 증가할 확률이 높는데, 한국○○공단이 최근 5년 간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123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찰률 70% 이상은 사고 발생률이 35%인 반면, 70% 이하로 낙찰받은 현장의 사고 발생률은 7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동안 최저가낙찰제의 폐해가 증가하면서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입·낙찰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가격과 기술을 동시에 평가하는 동시에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공사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낙찰자를 선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종합 평가 형태의 최고 가치형 입·낙찰제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
- 특히, 300억원 이상 정부 발주 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입찰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정부 공사 최저가낙찰제의 폐지 및 종합 평가 방식의 도입 방안>

구분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일반 공사	<p><b>적격심사낙찰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보호, 예를 들어 과잉 자격자(Over-Qualified Bidder)의 입찰 제한</li> </ul>	<p>최저가낙찰제 폐지(혹은 축소)-&gt; <b>종합평가낙찰제(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자격 심사</li> <li>- 투찰 가격에 대한 저가 심사</li> <li>- 종합 평가(투찰 가격 + 계약 이행 능력 + 시공 계획서 등)</li> </ul>
기술력 요구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이행 능력 평가시 발주자 혹은 수요기관의 자율권 강화</li> <li>- 계약자로서 자질 평가 강화</li> </ul>	<p><b>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b> <b>대안입찰</b> <b>기본설계 기술 제안 입찰</b></p>
<p><b>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b> : 적용 요건 완화, 기술 제안서 작성비 보상 등 필요</p>		

■ 입찰자의 투찰 가격과 계약 이행 능력, 시공 계획서(혹은 VE 제안서) 등을 종합 평가

-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때, 현재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는 300억원 이상의 중대형 공사에서 새로운 최고 가치형 낙찰 제도를 도입할 경우, 투찰 가격과 계약 이행 능력, 기술 제안서 평가 등이 균형 있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구상 필요
  - 투찰 가격의 평가시 덤핑 투찰에 의한 부실 시공이나 안전 재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저가 심사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요구됨.
  - 계약 이행 능력의 평가는 공사 경험이나 기술자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기술력의 평가는 입찰자의 부담을 경감하되 해당 프로젝트의 현장 여건과 특성을 가미한 ‘시공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함. 단, VE(Value Engineering, 가치 공학) 제안의 여지가 있는 공사에서는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 도서와 물량 내역서를 검토하여 원가 절감이나 공기 단축 등 시공 관련 아이디어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함.
- 최고 가치 유형의 입·낙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의 속성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평가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발주기관의 역량과 책임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됨.
  - 주관적 평가가 가미될 경우, 주관적 평가 결과가 낙찰을 좌우할 수 없도록 계약 이행 능력 평가와 투찰 가격 평가에서 변별력을 기하고, 최종 낙찰자의 결정 과정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최민수(연구위원 · mschoi@cerik.re.kr)

\* 미국 연방 조달청(GSA)의 경쟁적 제안(Competitive Proposals) 방식, 미국 미시간주, 워싱턴D.C. 교통국의 최고 가치 낙찰 사례, 영국 고속도로청의 사례, 일본의 입찰 VE 방식과 종합 평가 낙찰제 사례 등

## 3월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

- 새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 기대치 높지만 실행력이 담보되는 대책되어야 -

### ■ 주택시장 실적 지표는 악화, 시장 심리는 새 정부 정책 발표에 대한 기대로 호전

- 2013년 들어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세와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이 또다시 증가하는 등 각종 실적 지표들이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택 거래량도 취득세 감면 조치의 종료에 따른 효과로 1월에는 급감하였음.
  - 2013년 1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7만 4,835호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는데, 역시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수도권에서의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전·월세 가격의 상승에 따른 주택 수요로 준공 후 미분양은 약 3,899호가 소진된 반면, 신규 미분양은 4,040호가 증가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음.
- 주택시장의 각종 지표들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매시장에서는 응찰자가 증가하면서 낙찰가율이 소폭 상승하고 기존 주택의 거래량도 2월 들어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매수 심리가 개선되는 징표가 포착되고 있음.
  - 국토연구원이 매월 발표하는 부동산 심리 지수 역시 1월 들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새 정부가 출범한 후 3월 중으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됨.
  -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새 정부 출범 이후 3월 중에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새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직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3월로 예정되었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우려’와 ‘실망’으로 전환되고 있음.
  - 세제, 금융 등 여러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부동산 대책이 조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3월 말까지 물리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용을 포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임.

### ■ 정부 정책 집행에 대한 불신으로 기대만큼 우려도 커, 신뢰성 확보 방안 우선돼야

- 이와 같은 시장의 우려는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다양한 주택시장 대책들이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계류되거나, 내용이 변경되는 등 부정적인 학습 효과가 크게 기여함.

-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의 경우,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행력 및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큼.
- 정부 조직 구성의 지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감을 감안할 때, 무리하게 3월 중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보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현재 시장은 대책의 내용보다는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는 정부 대책의 실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음.
  - ※ 당초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이 3월 국회로 연기되면서 취득세 감면에 대한 기대가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우려로 변화되고 있음.
  - 최근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듯한 모습이 비쳐지면서 시장에 혼선과 정책의 불신은 더 커지고 있음.
  - 또한, 부동산 대책은 단순히 부동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수 경기 정상화 차원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됨.
  - ※ 부동산 경기는 건설뿐만 아니라 전후방으로 산업에 미치는 연관 효과가 크며 이들은 주로 지역 영세 사업자 및 자영 업자들과 연계되어 있어 내수 경기 차원에서의 접근이 요구됨.
- 그러므로 이번 부동산 대책은 대책을 수립하는 다수의 유관 부처와 입법 기관, 해당 지자체장들이 함께 모여 대책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조의 틀이 구비된 이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현 상황에서는 대책의 내용보다는 실행력이 담보되는 것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즉, 대책이 발표되고 나면 신속하게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 절차가 수반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취득세의 감면이나 재개발·재건축 정책 등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갈등의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므로 지방 정부와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김현아(연구위원 · hakim@cerik.re.kr)

## 빅데이터,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

- 건설업계, 데이터 낭비자에서 전략적 데이터 관리자로 탈바꿈해야\* -

### ■ 데이터 홍수의 시대, Tera(1조)도 데이터의 양을 표현하기에는 역부족

- 1990년대 디지털 시대의 도래 이후 데이터 축적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2011년 인류가 생성한 데이터는 1조 9,000억 기가바이트(Gigabyte)를 넘어섰고, 2020년에는 35조 기가바이트에 이를 전망이다.
  -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는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2003년까지 인류가 생성한 데이터가 5엑사바이트(Exabyte)\*\* 수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제 그 정도 양의 데이터는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생성되는 시대가 되었음.
  - 2011년 기준, 매 초 전송되는 이메일은 290만 건, 하루 발생하는 트윗의 양은 5,000만 건, 구글이 매일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은 240억 메가바이트(Megabyte)에 이름.

### ■ 빅데이터란

- 빅데이터란 기존의 데이터 베이스 관리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의미함.
  - 빅데이터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관리와 분석이 매우 어려운 데이터 집합, 그리고 이를 관리·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조직 및 관련 기술까지 포괄하는 용어임.
- 빅데이터는 3V로 통칭되는 규모(Volume),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의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음.
  - 데이터의 규모가 메가(Mega, 100만), 기가(Giga, 10억)바이트에서 테라(Tera, 1조), 페타(Peta, 1,000조), 엑사(Exa, 100경)바이트로 증대되었음.
  - 정형 데이터\*\*\*에서 비정형 데이터(동영상, 음악, 메시지,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로 다양해졌으며, 유통 활용 주기는 몇 일~몇 주에서 몇 분~몇 초 단위로 빨라졌음.

\* 본 글은 함유근, 채승병(2012)의 “빅데이터, 경영을 바꾸다”(삼성경제연구소 출판)와 GreenBiz.com에 게재된 뉴스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엑사바이트는 100경 바이트(=10억 기가바이트)로 10<sup>18</sup>바이트임.

\*\*\* 엑셀과 같은 규격화된 프레임 워크에 일목요연한 표로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봄.



## ■ 전 지구적 관심 증폭

- 2012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빅데이터를 미래의 국제 개발에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기술 중 하나로 지목하였음.
- 2012년 3월,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서는 미국의 빅데이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연구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음.
- 2012년 11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빅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음.

## ■ ‘편익 증가, 생산성 향상, 에너지 소비 절감’ 유용성 기대

- MGI\*의 연구에 따르면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미국의 의료 서비스 부문에서 연간 3,000억 달러의 편익과 생산성 0.7%의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유럽의 공공 행정 부문에서 매년 2,500억 유로의 편익과 생산성 0.5%의 증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
- 미국 소매 사업 부문의 이익은 60% 증대될 수 있고, 제조업도 제품 배치와 조립 비용의 최대 5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 건설업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 건설업계는 데이터의 중요성과 잠재 가치가 미래로 갈수록 증대될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하며, 빅데이터의 활용 역량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고하는 계획이 필요
- 데이터의 축적조차 체계적이지 못한 건설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빅데이터는 요원한 ‘환상의 기술’로 비쳐질 수도 있음.
- 하지만, 빅데이터는 미래의 경쟁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임.
- 빅데이터 시대의 강자로 부상한 아마존의 창업주 제프 베조스가 말한 “우리는 절대로 데이터를 내다버리지 않는다”는 시사하는 바가 큼.

강상혁(연구위원 · shkang@cerik.re.kr)

\* Mckinsey Global Institute :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 산하의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3. 5	국회 이재경 의원실	• 국회 이재경 의원실 주최, '건설산업 중흥을 위한 해법 토론회'에 건설관 리연구실 이복남 연구위원 참여 - 지명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
	동반성장위원회	• 동반성장위원회 주최, '제9차 건설업종 동반 성장 실무위원회'에 건설정책 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참여 -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SOC 투자 확대, 민간 투자 사업 활 성화)'에 대한 주제 발표
	국토연구원	• 국토연구원 주최, '빅데이터를 이용한 부동산시장 침체 원인 분석 방안 자 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참여 - 부동산시장 침체의 원인과 진단에 대한 자문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주최, '실물자산운영위원회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 아 실장 참여
3. 7	국회 김관영 의원실	• 국회 김관영 의원실 주최, '분양가상한제 세미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 아 실장 참여 - 분양가상한제 관련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3. 8	국토해양부	• 기술기준과 주최, '실적 공사비/표준품셈 및 VE 제도 개선 TF 2차 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최석인 연구위원 참여 - 실적 공사비 분과 위원 자격으로 참여

■ 「민간투자사업 회계/세무 실무 과정」 개설

- 기간 및 장소 : 2013. 3. 19(화), 건설회관 9층 연수실
- 문의 및 참조 : 연구원 교육 담당(02-3441-0691, 0848),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 CERIK저널 3월호 발간

- 특집 : '하우스·렌트 푸어, 어떻게 풀어야 하나'
- 이슈 진단 : '최저가낙찰제-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리모델링 정책-노후 아파트 사용  
가치 향상에 초점을'
- 기타 : '2012년 12월 국내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41.6% 감소', '12월 건축 허가 면  
적, 전년 동월 대비 9.2% 증가', '2013년 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전월 대비  
0.14% 떨어져', '2012년 주택 건설 인·허가, 전년 대비 6.8% 증가' 등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참조

## 박근혜 정부의 ‘反面教師’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이 지난 달 25일 개최되었다. 각계 각층에서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돌이켜보면 5년 전 이 때도 비슷했다. 우리는 첫 기업가 출신 대통령에게 규제 혁파와 새로운 경제 도약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이명박 정부도 이를 알고 ‘747’이라는 화려한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747’의 첫 숫자 7은 국가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의미했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가 제시하는 이 비전의 비행기에 탑승하여 이제 곧 하늘을 날 것만 같은 꿈을 꾸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국가 경제성장률은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2%까지 곤두박질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로존 재정 위기라는 대외 악재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10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한 건설투자의 극심한 부진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이었다. 2012년 건설투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07년에 비해 무려 10% 가까이 감소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투자가 극도로 위축된 결과였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 공약집을 살펴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비난 여론을 가장 큰 반면교사로 여긴 듯하다. 공약집에는 ‘토목 건설 지출 조정’, ‘국토 개발 최고 정책 당국자 실명제 도입’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비난 여론을 의식한 여러 공약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지난 정부로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는 국가 사업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한 비난 여론뿐 아니라 건설산업의 비정상적 침체로 인한 국가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력 위축이다.

최근 2012년 국내 건설수주가 101.5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전년비 9.2조원이나 급락했고, 7년 만에 최저치이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3%로 가정할 경우, 9.2조원 감소는 매년 경제성장률을 0.3%p씩 떨어뜨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2만 6,000명의 취업자 수 감소를 초래할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건설산업은 타 산업으로의 생산 유발 효과가 큰 산업이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취업 유발 효과가 크다. 향후 주택 경기 침체가 당분간 더 지속되고, 정부의 중기 재정 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SOC 예산을 줄여나간다면 박근혜 정부도 목표하는 고용률과 경제성장률 달성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건설산업의 산출물은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는 자본재를 구축하는 것이며, 복지 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747’ 비전이 날개를 펴지 못하고 추락한 것에는 건설산업의 비정상적 침체에도 분명 큰 원인이 있었다. 이 점이 박근혜 정부가 꼭 기억해야 할 ‘반면교사’다. <건설경제, 2013. 2. 28>

이홍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